

## 사회연대경제(SSE)를 통한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모델 탐색

조성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원장)

### 논문요약

두만강 유역은 동북아의 변방에 해당한다. 만주로 상징되는 이곳은 근대화 시기 이후 줄곧 대결의 공간이었다. 두만강 유역이 대결의 공간에서 연대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1991)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2005) 등을 추진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중앙정부 주도여서 지정학적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UN-SDGs가 실천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SSE)'가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에서 갖는 의미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프랑스에서 태동한 사회연대경제 개념을 살펴보고, 스위스-프랑스-독일 접경도시인 스위스 바젤(Basel)의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초국경 협력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실제 두만강 유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요 사회연대경제 프로젝트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이 가능함을 결론으로 제시했다.

주제어 : 사회연대경제, 초국경협력, 두만강 유역, 라선, SDGs, 바젤



## I. 서론

### 1. 문제 제기

오늘날 동북아 초국경 협력을 상징하는 두만강 유역은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러시아 연해주 그리고 북한의 라선이 만나는 곳이다. 20세기 초, 대결의 공간이었던 두만강 유역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초국경 협력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과거 굶주린 조선 백성의 생명을 이어가려는 인내가 초국경 협력의 동력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일국(一國) 중심에서 벗어나 인접한 다국적 도시들이 평화의 정신에 기초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려는 상생의 철학이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변방은 변화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며 생명의 공간이다.”<sup>1)</sup> 두만강 유역은 만주의 변경(邊境)이자, 동북아의 변방에 해당한다. 두만강 유역이 대결의 공간에서 연대와 협력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번영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1990년대 초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1991)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2005)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은 그 타당성이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국제변수와 맞물려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새로운 공간은 새로운 체제를 요구한다.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결의 장이었던 유럽은 힘겹게 연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같은 프랑크 왕국에서 나왔지만 양차 세계대전에서 적대국 관계가 되어 버린 프랑스와 독일이 있다. 그 성과로 오늘날 유럽연합이 출범했으며, 프랑스와 독일의 대결 공간이었던 알자스-로렌이 평화와 경제협력 공간으로 변하고 EU본부가 들어선 사례도 있다. 동북아에도 유럽통합 사상에 버금가는 중요한 사상이 있었다. 바로 안중근이 만주를 대상으로 제시한 『동양평화론』(1910)이다.

1) 신영복, 『변방을 찾아서』, 서울: 돌베개, 2012.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우리 세대가 실현해야 할 미완의 사상이다.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사회연대경제’(SS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국제협력 담론을 토대로 시민사회가 지방정부와의 협력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 2. 선행연구 검토

초국경 협력을 주제로 한 연구는 크게 유럽연합의 초국경 협력 연구와 동북아 초국경 협력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유럽연합의 초국경 협력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국외 연구는 ‘문화적·정치적 배경과 형성과정’, ‘경제협력’, ‘대도시개발 협력’, ‘거버넌스’, ‘정체성 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된 반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는 주로 사례연구 접근법으로 진행되었다.<sup>2)</sup>

동북아 초국경 협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러시아의 체제 전환(1991), 한·중 수교(1992) 연구가 있으며,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북·중·러 국경지역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2000년대부터 관련 사례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sup>3)</sup> 선행연구들은 국경지역의 영토문제, 국경관련 조약 및 체제에 대한 연구, 인구형성 및 지정학적 공간구조, 정치·경제적 관계, 문화교류 및 협력, 이민자들의 삶과 갈등 등을 분석했다.<sup>4)</sup>

최근에는 중국 경제력의 부상에 따라 중국을 둘러싼 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중점을 이루고 있다. 김수한(2014)은 경제특구 구상과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북·중 초국경 협력을 분석했다.<sup>5)</sup> 이현주 외(2016)와 원동욱(2022)은 중

2) 문남철, “유럽연합의 국경지역 간 초국경 협력: Grande Région 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제56권 3호, 2022, p. 148.

3) 윤황 외,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 분석: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권 1호, 2015, p. 249.

4) 윤황 외, 위의 논문, pp. 245~247.

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및 그 하위에 속하는 중·몽·러 경제회랑과 동북아 경제회랑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sup>6)</sup> 이현주 외(2020)는 중국이 변경지역에 설치한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대상으로 협력 및 활용방안을 연구했다.<sup>7)</sup> 이현주(2022)는 같은 맥락에서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국경지역에 설치된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중심으로 경제적 보완성 및 제도적 양립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남북접경지역 경제협력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했다.<sup>8)</sup> 조정원(2021)은 중국의 지린성과 헤이룽장성 및 러시아의 극동지역 사이의 초국경 경제협력 메커니즘의 현황과 장애 요인을 살펴보았다.<sup>9)</sup>

두만강 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윤황 외(2015)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중심으로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을 분석했으며,<sup>10)</sup> 최영진(2018)은 환동해 해항도시의 관점에서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누항을 비교했다.<sup>11)</sup>

최근 동북아 초국경 협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경제적 관점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적 관점에서, 그리고 경제특구 관점에서 진행되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초국경 협력의 성공 요인과 장애 요인을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북핵 문제 및 대북 경제제재 등 지정학적 요인에 의해 초국경 협력 프로젝트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의 지정학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통찰은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한

5) 김수현, “북중 초국경 협력의 지속과 변화 : 최근 경제특구 구상과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2권 4호, 2014, pp. 33~105.  
 6) 이현주 외,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중국종합연구』, 2016, pp. 1~126.; 원동욱, “한중 간 초국경 협력의 한계와 가능성: 동북아 경제회랑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중국연구』 제24권 1호, 2022, pp. 105~140.  
 7) 이현주 외,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중국종합연구』, 2020, pp. 1~182.  
 8) 이현주, “중국의 초국경 협력 평가 및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함의: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5권 4호, 2022, pp. 31~67.  
 9) 조정원, “중·러 초국경 경제협력의 메커니즘과 현황, 장애 요인: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31권 2호, 2021, pp. 267~304.  
 10) 윤황 외,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 분석: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중심으로”, pp. 243~263.  
 11) 최영진,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누항 비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8권 4호, 2018, pp. 233~269.

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위스·프랑스·독일 접경도시인 바젤(Basel)에서 시민사회가 사회연대경제(SSE)를 통해 진행하는 초국경 협력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접경 국가의 중앙정부가 광범위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메가 프로젝트는 불안정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현재로서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 초국경 협력의 가능성은 ‘소지역’ 관점에서,<sup>12)</sup> 중앙정부 대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되 사회연대경제(SSE)라는 대안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할 때 찾을 수 있다.

## II. 논의의 기초

### 1.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갖는 의의와 한계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옥중에서 ‘청취서’(일본어)와 ‘동양평화론’(한자)을 남겼다. 그중 ‘청취서’에 담긴 동양평화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토는 주인이 바뀔 수 없는 것이므로 일본이 전승 대가로 차지한 다렌과 뤼순을 중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곳을 대한제국, 중국, 일본 등 세 나라가 동양평화 실현의 중심지로 삼는다. 이를 위해 세 나라가 그 땅에 모여 동양평화회라는 경제공동체를 만들고 전 세계에 공표한다. 재정확보를 위해 개인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징수한다. 은행을 설립해 각 나라가 공유하는 화폐를 발행하고, 중요한 지역마다 평화지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은행 지점을 두어 금융 및 재정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

12) 신범식,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JPI 정책포럼』 Issue 8, 2014, pp. 1~26.

게 하면 동양 평화는 완전해지지만, 세계열강에 대비하기 위해 세 나라로부터 대표를 파견해 무장을 담당하고, 청년을 모아서 군단을 편성한다. 이때 청년들로 하여금 두 나라의 언어를 배우도록 하면 형제 나라라는 관념이 강해질 것이다.<sup>13)</sup>

그가 제시한 동양평화론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성과 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좌우 이데올로기 갈등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낫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런데 오늘날 동북아 긴장구조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한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초국경 협력을 위한 접근법은 이데올로기 갈등구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 2. 프랑스에서 발전된 사회연대경제(SSE) 개념

200여 년 전에 프랑스에서 사회적 경제(économie sociale)가 태동한 계기는 프랑스 혁명(1789) 이후인 1791년 6월 14일 헌법제정의회가 노동자의 단결을 금지한 르 샤플리에(Le Chapelier)법이다. 이 법이 노동자의 단결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19세기 초부터 상호구제조합이나 재난공제조합이 조직되었으며, 1830년부터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 그러다가 1884년에 이 법이 폐지되면서 합법적인 틀에서 각종 조합들이 결성되었지만, 본격적인 시작은 그에 앞선 1840년대에 시작된 산업혁명이었다.<sup>14)</sup>

긴 시간이 흘러 1981년 말에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이 프랑스 법에 명시된다. 1981년 10월 15일 법령에서 사회적 경제 담당정책조정실 창설이 명시되고 사회적 경제를 ‘협동조합, 공제조합과 결사체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처음으로 정의했다. 이후 사회적 경제 관련법이 4개의 조직만을 인정하고, 한 영토에 한정되며, 환경 문제를 도외시켰다는 한계를 가지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법 제정을 공약에 포함하고 2012

13) 안중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손태수·신현하·김월배 옮김, 서울: 서울셀렉션, 2019, pp. 51~53.

14) 티에리 장테,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편혜원 옮김, 서울: 알마, 2019, p. 17.

년에 당선되었다. 당선 후 첫 내각의 사회연대경제 담당 장관으로 브누아아몽을 임명하고 사회연대경제법을 준비토록 했다. 사회연대경제법은 2014년에 제정된다.<sup>15)</sup>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우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한다. 따라서 자본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과 출자금을 연계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자연인은 ‘이중 지위’를 지닌다. 회원이면서 동시에 임금노동자, 소비자,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다. 셋째, 소유권은 분할 불가 원칙이며, 구성원 전체에게 속한다. 넷째, 창출된 이익은 ‘공평하게’ 나눈다.<sup>16)</sup> 이러한 원칙은 협동조합의 기본원칙과도 공통되며, 여타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개념들과도 공통된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그 개념이 갖는 한계로 인해 사회연대경제로 발전해 오면서, 이제는 국제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회연대경제 추진 대륙 간 네트워크(RIPESS)’이다.<sup>17)</sup>

### 3. 사회주의 국가 쿠바의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남미 국가의 일원이자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사회연대경제’ 플랫폼을 중시하고 있다. 쿠바 하바나대학교의 라파엘 베탄쿠르(Rafael Betancourt) 교수가 내세우는 쿠바 사회연대경제의 강점은 다양한 의미와 개념을 아우른다는 점이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5) 장테, 위의 책, p. 71.

16) 장테, 위의 책, p. 76.

17) 히로타 야스유키, “사회적경제에서 연대경제로 :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라이프인』, 2020년 6월 15일.

-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우선시하고 집단적으로 연대하여 일하는 생산자,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활동
- 자본의 재생산이 아닌 노동이 삶의 중심인 사회적 경제를 구성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창출이 목표
- 모든 집단—가족, 커뮤니티, 지역, 국가, 그리고 전 세계—차원에서 구성원 간 연대의 가치함양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 쿠바의 사회연대경제 비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사회연대의 핵심인 거시경제 분야는 대부분의 경제적 주체를 포함한다. 여기에 공기업과 예산조직은 물론 심지어 자영업자도 포함된다. 경제 전체가 사회연대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 포용적 지역발전을 통한 번영, 민주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한다. 셋째, 쿠바의 사회연대경제는 아래에서 시작되는 사회주의이다.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와 쿠바의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철학적인 공통성을 갖는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회연대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 주도로 발전해 왔다면, 쿠바의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주의 국가 형성 시기, 혼합경제 전략으로 활용했던 협동조합 경험이 오늘날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 과정에서 사회연대 경제라는 흐름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비단 유럽이나 중남미 국가만이 아닌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전환하려는 국가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 4. UN의 사회연대경제 접근법 선택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는 유엔은 SDGs와의 맥락 속에서 프랑스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SDGs는 2015년 제70차 UN총회 및 UN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제정되었을 정도로 국제적인 합의 수준이 매우 높은 공동의 목표다. 북한도 ‘식량 및 영양 안보’, ‘사회 개발 서비스’, ‘복원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라는 4대 목표를 설정하여 참여하고 있다.<sup>18)</sup> UN 회원국인 북한은 2021년 7월 13일에 처음으로 UN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정치포럼(HLPF) 화상회의에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를 제출하고, 자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현황 및 전략, 그리고 추진체계를 보고했다.<sup>19)</sup>

UN은 SDGs 플랫폼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주도로 2013년 말에 ‘사회연대경제 글로벌 시범 그룹’을 창설했다. 2014년 9월에 창립된 이 그룹은 2015년 9월, 1차 정상급 회의에서 ‘사회연대경제 글로벌 시범 그룹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sup>20)</sup>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는 SDGs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인 실행 방안이다.”

공동선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이 UN 산하 17개 국제기구가 함께 사회연대경제를 국제 의제화하기 위해 만든 태스크포스이다. 이를 ‘유엔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SE)’로 부른다. UNTFSSSE에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등 십여 개의 국제기구들이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시티즈(CITIES), 지세프(GSEF) 등 12개 단체가 옵서버로 함께한다.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들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강조

18) 최현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북한의 노력” 『대전일보』 2019년 4월 10일.

19)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한 VNR 을 읽어드립니다” 2021년 7월 29일.

20) 장테,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pp. 309~311.

하고 있다.<sup>21)</sup>

## 5. 초국경 협력을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선택한 이유

이러한 흐름에서 사회연대경제 개념은 초국경 협력에서도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밑으로부터 시민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주체가 되어 초국경 지역간 연대를 강화하는 개념으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sup>22)</sup>

본 연구에서 초국경 협력을 위해 사회연대경제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연대경제는 뒤르켐의 ‘불평등 없는 사회적 연대로서의 평화론’과 연결된다. 둘째, 사회연대경제는 조직과 영토를 초월하는 포괄성을 갖는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이어줄 수 있다. 셋째, UN의 지지로 SDGs와 사회연대경제의 연결성이 높아졌다. 넷째, 사회연대경제는 소유권 및 거버넌스 측면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와 충돌하지 않는다. 북한의 ‘협동경리’는 사회연대경제로 해석할 수 있으며, 특히 헌법에서 토지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로 명시되어 있다. 다섯째, 사회연대경제는 쿠바 사례가 보여 주듯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가능성을 높여준다.<sup>23)</sup>

21) “[UNTFSSSE 국제컨퍼런스 2019]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국제기구들” 『이로온넷』 2019년 6월 26일.

22) 조성찬 엮음,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서울: 맑은나무, 2020.

23) 조성찬,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서울: 한울, 2019.

### III. 정체된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

#### 1. 두만강 유역의 지정학적 중요성

두만강 유역은 중국의 동북 3성에게는 출해 통로이면서, 러시아에게는 극동 개발의 전초기지이고, 북한에게는 중러와의 경제협력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그리고 한국에게는 유럽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일본에게도 동북아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목이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을 이어주는 두만강 유역은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어서 UNDP는 이른 시기부터 이 지역을 주목했다. 또한 두만강 유역을 둘러싼 국가들은 초국경 경제협력 관점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 2.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의 정체를 가져온 지정학적 요인들

특정 지역이 지정학적 중요성을 갖는다고 해서 그러한 이유로 각종 개발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두만강 유역의 지정학적 위상은 초국경 협력을 막거나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초국경 협력에 있어서 지리적 접근성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간 정치적 역학관계, 즉 지정학적인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인접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적 관계가 협력적이어서 초국경 지역에서 이동성과 협력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야 거버넌스, 유사한 언어와 문화의 공유, 신뢰 구축 등이 가능해진다.<sup>24)</sup>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 및 두만강 유역의 지정학적 위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탈냉전 이후 전개되기 시작한 동북아 초국경 협력 가능성은 부침을

24) 윤황 외,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 분석: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중심으로”, pp. 248~249.

겪어 왔다. 그런데 두만강 유역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초래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북한의 핵실험이다. 핵실험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는 협력을 막는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14년, 2022년)으로 인한 경제제재 역시 사람과 물자의 흐름을 차단했다.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경제제재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지정학적 요인은 미중 패권갈등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에 아시아 재균형전략 혹은 아시아 회귀전략(pivot strategy to Asia)을 취하면서 동북아는 군사적 갈등이 강화 및 지속되고 있다.<sup>25)</sup> 이에 대해 중국은 자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려는 미국과 일본의 동맹체제와 확산을 저지하고, 중국 주도의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sup>26)</sup> 이 외의 지정학적 갈등 요인으로, 2016년 사드문제로 인한 한중관계 악화, 2019년의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최근 일본의 선제 타격 합법화가 있다.<sup>27)</sup>

### 3. 주요 개발계획

#### (1) 다자협력 : TRADP, GTI

탈냉전 이후 초국경적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이를 통한 이동과 흐름이 증대되어 왔다. 그 결과 새로운 지역주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신범식(2020)은 헨슨(Hansen)의 접경시대(borderland) 개념을 차용하여 ‘초국경 소지역’ 개념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소지역을 이해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지역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sup>28)</sup> 이러한 흐름은 ‘자연경제구역(NETs: National Economic Territories)에서 중앙의 통제를 우회하는 자발적인 교류

25) 이수형, “연구 동향과 서평 :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의 한반도 시사점” 『KINU 통일+』, 2014, p. 76.

26) 원동욱, “한중 간 초국경 협력의 한계와 가능성: ‘동북아 경제회랑’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중국연구』 제24권 1호, 2022, pp. 107~108.

27) “日, 적국 '선제 타격' 가능해졌다...5년뒤 방위비 세계 3위로” 『한국경제』, 2022년 12월 16일.

28) 신범식 엮음, 『북중러 접경시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 서울: 이즈, 2020, p. 11.

현상에 주목한 유엔개발계획(UNDP)의 소지역 개발 프로젝트인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입안으로 이어졌다.<sup>29)</sup>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1991)과, 다음 버전인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2005)은 동북아 유일의 다자간 경제협력체이다.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이 국제기구가 주도했다면,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개별 국가가 주도한 다자간 협의체 성격이다. 1990년 중국 지린성에서 개최된 동북아 경제-기술협력 회의에서 두만강 유역 개발정책 아이디어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후 유엔개발계획(UNDP) 주도로 관련국들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991년 10월 24일 뉴욕본부에서 북중러 접경지역 두만강 유역 삼각주를 국제적인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처음에는 관련국이 공동출자하여 국제기구로 결성하려고 했으나, 참여 부진으로 ‘정부간 협의체’로 결성되었다. 이때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이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며, 일본은 옵저버로 참여했다.<sup>30)</sup>

TRADP는 중국 훈춘-북한 라선-러시아 포시에트(Posyet)로 연결되는 소삼각 지역을 두만강유역경제지구(TREZ: Tumen River Economic Zone)로 하는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함으로써 주변의 확대된 두만강유역경제개발구(TREDA: Tumen River Economic Development Area) 전체의 발전 동력으로 삼고자 했다. 주변 지역은 중국 연변과 북한 청진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하는 배후지역(대삼각 경제개발구역)까지 포괄한다. 하지만 TREZ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안이 표류하고 관련국들이 자국 영토 내 지역을 개발하면서 그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이로써 대삼각 경제개발구역을 지향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sup>31)</sup>

UNDP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3단계 사업을 끝으로 그 주도권과 역할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TRADP의 다음 버전인 GTI가 탄생하게

29) 신범식 엮음, 위의 책, p. 17.

30) 김재효, “[바이든 시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활성화 방안”, 2021년 3월 22일.

31) 신범식 엮음,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 p. 17.

된 것이다. UNDP의 주도성이 마무리된 2005년에 TRADP 협력위원회(CC)는 기존 명칭을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en Initiative)’으로 변경하고, 프로젝트 기간을 10년 연장하여 ‘GTI 전략사업 구상: 2005-2015’를 합의하였다. 이 구상에는 교통, 관광, 에너지, 투자, 환경 및 추후에 농업분야를 추가하여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공동기금도 설립하고, 협의체 대상 범위도 광역두만강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sup>32)</sup>

이후 중국 정부는 2009년에 GTI를 동북3성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하고, 러시아는 신극동지역 개발계획(극동개발, 에너지·교통 장기 전략 2020, 에너지자원 통합공급시스템 구축)과 연계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핵심 당사국인 북한은 제2차 핵실험으로 초래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GTI의 두만강유역 라선특구 개발이 저조한 것에 불만을 품고 탈퇴했다. 이후 GTI는 최고 의결기구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2016년까지 국제기구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며, ‘2017-2020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동북아 번영 및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회원국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시너지를 창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오늘날 GTI의 국제기구 전환 방향성만 재확인하고 있을 뿐 실제적인 진전은 없다.<sup>33)</sup>

## (2) 양자협력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GTI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오늘날 북중러 접경지역 협력은 다자협력 대신 개별 국가가 자국의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가운데, 필요한 경우 인접국과 제한적 협력을 모색하는 ‘양자협력’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sup>34)</sup>

32) 김재효, “[바이든 시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활성화 방안” 2021년 3월 22일.

33) 김재효, 위의 글.

34) 신범식 엮음,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 p. 19.

### 북중 간 경제협력

라선 경제특구는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 전략과 맞물려 1991년 12월 <라진-선봉지역 경제자유무역지대> 설립으로 시작했다. 이후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자협력을 포기하고 양자협력으로 전환하였다. 2009년에 중국의 동북 3성 창지투 개발계획이 출해(出海) 통로인 북한의 라진-선봉항과 연결되면서 중국 투자로 철도, 도로, 항구 인프라를 개선했다. 2010년 1월에는 라선특별시로 승격하고,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했다. 중국의 ‘차항출해’ 및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연계하여 나진항을 장기 임차해 주었다. 향후 발전계획은 나진항을 중심으로 선봉항, 웅기항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GTI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중국은 2009년에 GTI를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시켰다. 이후 중국(훈춘)국제합작시범구를 설치하고 북한 라선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두만강대교(훈춘-나선) 개통(2016.10)이 있다. 이 외에도 2001년과 2010년에 추진된 경계하천 도로대교 수리사업이 있다.

### 중러 간 경제협력

2009년에 GTI를 동북 3성 개발계획과 연동하여 중앙정부 사업으로 격상시킨 중국은 북한이 GTI를 탈퇴하면서 라선항을 활용할 수 없게 되자, 대신 러시아 연해주의 자루비누항으로 시선을 돌렸다. 중국은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중-몽-러 경제회랑 구축 차원에서 자루비누항으로의 출해 전략을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2016년 6월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의 32개 프로젝트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마침 러시아는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동방정책 가속화와 유라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EAEU 확대를 시도하고 있었다.<sup>35)</sup> 러시아는 2012년 5월에 ‘러시아 대외정책 실현을 위한 방안’, 즉 신동방정책을 발표하고 아시아 태평양

35) 제성훈 외,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 심층연구』 16-01, 2016, p. 3.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러시아의 낙후된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 중, 연방 정부는 극동개발부를 신설(2012)하고, 2013년에 「극동-바이칼지역 사회경제 발전전략 2025(신극동정책)」을 발표했다. 2015년 3월 25일에는 러시아 연방법을 발효하여 극동에 사회경제선도개발구역(2017년 12월 기준 18개)을 지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수출을 위한 전략 지구로 추진중이다. 또한 블라디보스톡 등 5개 항구도시는 2016년 7월 발효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에 따라 홍콩과 같은 자유항으로 지정하여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sup>36)</sup> 자유항에는 자루비누항도 포함되었다.

러시아가 추진한 ‘신동방정책’은 자국의 발전전략 외에도 동북아 및 아태지역을 철도와 에너지망(網)으로 연결하여 이들 지역과의 통합을 가속화한다는 전략도 포함하였다. 그리고 두 국제운송통로(프리모리예-Ⅰ, Ⅱ)가 제시되고, 2030년까지 러시아 재무부는 연간 1,000억 루블(약 17억 달러)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프리모리예-Ⅱ 루트가 지린성 창춘, 지린, 옌지, 훈춘을 거쳐 러시아 자루비누항으로 가는 길이였다.<sup>37)</sup> 중국 주도로 추진된 ‘중-몽-러 경제회랑 건설 프로그램’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만나는 지점에 동해 출구인 자루비누항이 있다.

중국의 필요와 러시아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추진된 인프라 개발사업은 2013년 12월에 재개통된 훈춘-마하리노 철도사업, 2016년의 통관센터와 통상구 종합검사빌딩 및 통상구 환적기능 확대사업이 있다. 그리고 시베리아가스관-중국 하이허간 개통(2019) 프로젝트도 있다.<sup>38)</sup>

36) “[이한솔의 러시아 경제], 세계가 극동에 주목하다” 『biz NEWS』 2018년 10월 18일.

37) 최영진,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누항 비교”, pp. 239~241.

38) 최영진, 위의 논문, p. 247의 <표 1>.

### 북러 간 경제협력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북한과 합의 및 추진된 사업으로 나진-하산 철도 연결사업(2013년 9월 개통, 약 1억 6천만 달러 투자), 나진항 개보수 사업(약 1억 1천만 달러 투자), 대북 차관 100억불 탕감 및 북한철도 현대화 지원계획 합의(2014)가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이 러시아 측에 중고 여객기와 금광 채굴권 맞교환을 제안하기도 했다.<sup>39)</sup>

### (3) 삼자 간 개발협력: 북중러 두만강 삼각주 국제관광합작구 계획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이 북핵 문제라는 지정학적 이유로 추진되지 않게 되자, 2010년부터 중국이 주도적으로 인접국인 러시아와 북한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공통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 합의 도출이 용이한 국제관광을 출발점으로 삼는 두만강 하구 개발사업을 계획했다. 중국의 목적은 관광사업 그 자체가 아니라 자루비누항과 라선항을 통한 동해 출구 확보 및 국제 물류 시스템 구축이었다. 여기서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를 낳은 결정적인 사안은 2012년 ‘중국두만강지역(훈춘)국제합작시범구’ 지정 및 시진핑 정부가 추진한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동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탄생한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는 기본적으로 북중러가 함께 국경을 초월해 공동구역을 정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모델의 핵심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40)</sup>

39) 최영진, 위의 논문, p. 246.

40)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图们江三角洲旅游合作区规划通过中俄朝三国专家评审” 2016년 6월 23일; “《珲春市图们江三角洲(中-俄-朝)国际旅游合作区总体规划》项目进场考察圆满完成” 『巅峰智业』 2015년 8월 21일.

- 북중러 접경지역에 ‘무국경’의 새로운 공간 탄생. 국경을 따지지 않고 세 나라가 관광이라는 자원을 공유해 이익을 얻음.
- 공간 범위는 중국 연길-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하산구, 북한 라선특구-라진항이라는 3대 중심도시. 구체적으로는 두만강 하류가 중심축이 되어, 훈춘 방천, 북한의 두만강동, 러시아 하산진으로, 약 100km<sup>2</sup>의 국제관광 합작구가 형성됨.
- 각국이 10km<sup>2</sup>의 토지를 개발건설구역으로 제공하고, 3국이 공동으로 관광레저오락시설을 건설하여 ‘1구 3국’ 공동관리 모델 탐색.
- 구역 진입시 무비자, 나올 때 무관세. 72시간 무비자.

#### 4.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초국경 협력의 중요성

다자협력과 개별 국가가 주도한 양자협력 모두 공통점은 중앙정부 중심의 접근법이다. 기업은 이러한 구조에 예속되어 있으며, 시민사회 영역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국경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근 유럽통합의 역사를 보면 적어도 공권력은 시민영역의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정치·군사적 갈등관계로 인해 막힌 초국경 협력의 물꼬를 트는 일은 현재로서 비정치적이며 비군사적인 인도협력사업이 대안이다. 국제 시민사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점이다.

#### IV.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유럽의 초국경 협력 : 스위스 바젤(Basel)

##### 1. 유럽통합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

오늘날 유럽연합(EU)으로 상징되는 유럽통합사(史)에는 수많은 국제 정치·경제적 변수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유럽 시민사회의 역할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평화로운 통합을 위해서는 “시민의 각성과 평화적 공생정신을 토대로 민주 시민사회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은 큰 의미가 있다.<sup>41)</sup> 실제로 유럽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유럽화’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예술과 학문 및 학생의 교환을 촉진하고자 했다. 여기에 더해 경제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었고, 평화, 민주주의, 인권 등의 이념을 토대로 가치관의 동화가 서서히 이루어졌다.<sup>42)</sup>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유럽통합의 출발은 시민사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조직되었으며, 서로 배우고 일하며, 유럽의 공동 가치관과 평화 공동체를 모색한 독일-프랑스 협회(Dddddeutsch-Franzoeseische Gesellschaft)가 대표적이다.<sup>43)</sup>

본 연구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조약 제3조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구한다는 규정은 큰 의미가 있다. 유럽연합조약이 언급한 ‘사회적 시장경제’는 “질서 자유주의에 토대를 두고 정부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정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완전한 자유로운 경쟁을 추구하면서 시장에서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독점과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통제한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흐름이나 시장 매커니즘에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 아울러 저임금 또는 빈곤층을 고려한 복지, 사회 정책을 시장경제와 연계하여 실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4)</sup> 유럽연합은 실제로 시장통합으로 인한 지역간 불평등을 해소

41) 김해순, 『평화의 거울 : 유럽연합』, 용인: 킹덤북스, 2021, p. 245.

42) 김해순, 위의 책, p. 271.

43) 김해순, 위의 책, p. 275.

44) 김해순, 위의 책, p. 528.

하기 위해 낙후 지역에 개발지원금을 제공하고 연대를 통해서 격차를 좁히고 있다.<sup>45)</sup>

초국가적 성격을 띠는 유럽연합은 다양한 층위와 주체로 권한을 배분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를 다층적 통치로도 부를 수 있다.<sup>46)</sup> 유럽연합은 독점적 권한, 회원국과 공유하는 권한, 그리고 회원국을 지원하는 권한의 3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은 회원국가, 하위정부 및 비정부 기관과 권한을 배분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들과 경쟁 또는 협력을 거쳐 초국가적 정책을 결정한다.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바로 유럽연합이 비정부 기관과도 권한을 배분하고 협력한다는 점이다.

## 2. 유럽연합 초국경 협력 프로그램과 사회적 기업가의 상보성<sup>47)</sup>

유럽은 시민의 3분의 1(1억5천만)이 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동일한 국가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물론 국가 및 지역정부 역시 접경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sup>48)</sup> 그런데 접경지역 협력의 정의(Sousa, 2013)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협력의 주체로 공적기관 뿐만 아니라 사적 기관도 중요한 주체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은 1990년부터 초국경 협력과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Interreg과 같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Interreg은 포용적 성장, 저탄소 경제, 환경, 자원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Interreg 프로그램은 나름의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 Interreg Cooperation 문서(2015)에 따르면, 유럽연합 초국경 협력의 지배적인 제도 유형은 주로 로컬(local)과 지역(region

45) 김해순, 위의 책, p. 531.

46) 김해순, 위의 책, p. 64.

47) Wevers, T. Herman, et al., "Social Entrepreneurship as a Form of Cross-Border Cooperation: Complementarity in EU Border Regions" *Sustainability*, 2020, 12.

48) Wevers, T. Herman, et al., *Ibid.*, p. 2.

al) 정부, NGOs, 그리고 대학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기업은 크게 관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sup>49)</sup>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연합의 초국경 협력 프로그램이 사회적 기업과의 상보성(the complementarity)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Wevers, et al.(2020)는 사회적 기업과 EU 초국경 협력의 현지화는 서로를 강화하여 지역적 일상 문제를 줄인다고 결론 내린다.<sup>50)</sup>

Wevers, et al.(2020)는 또한 '신뢰 구축'은 유럽의 초국경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로컬 커뮤니티에서 양방향 협력을 통해 적대감과 불신을 감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3. 스위스 바젤의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초국경 협력

#### (1) 스위스 바젤 개요

유럽 초국경 협력의 대표 사례는 스위스 바젤이다. 스위스의 3위 도시 바젤은 인접한 프랑스의 생루이(Saint-Louis) 및 독일의 뢰어라흐(Lörrach Hbf)와 일체형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3개국 도시가 연담되어 형성된 하나의 Metropolitan Basel은 기술과 제약산업,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인구 규모는 지역관리 거버넌스(TEB) 기준으로 83만명의 거대한 경제권역이다. 이 중 스위스인이 60%, 독일인이 30%, 나머지 10%는 프랑스인이다. 중립국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님에도 쉥겐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김영찬(2015)은 바젤이 북한-러시아-중국-러시아-크라스키노 접경지역과 매우 유사하다고 보았다. 스위스 접경도시 바젤은 하루 6만명의 독일, 프랑스인들이 출근한다. 철도, 바젤공항, 도로망, 전차노선 등 도시 인프라가 3국 도시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3국

49) Wevers, T. Herman, et al., Ibid., p. 4.

50) Wevers, T. Herman, et al., Ibid., pp. 4~5.

지방정부가 연합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관리 거버넌스(TEB) 및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SEB)가 형성되어 있다.

(2) 바젤의 비영리 조직이자 작은 정부기관 역할을 감당하는 TEB

2007년에 설립된 TEB는 Trinational Eurodistrict Basel의 약자로, 프랑스 알자크(Alsace)에 근거지를 둔 비영리 조직이다. 아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TEB는 바젤의 초국경 도시협력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TEB는 비영리 조직이지만 3개국이 모여 형성된 바젤의 작은 도시정부 기관 성격으로, 초국경 프로젝트를 코디네이팅하는 역할을 하며, 다른 도시간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도 한다. 게다가 TEB는 공간계획, 대중교통 및 도시개발에 있어서 결합된 초국경 프로젝트를 조정하고 수행한다. TEB는 전신인 TAB(Trinational Agglomeration Basel, 2001년 설립)의 확장된 형태다.<sup>51)</sup>

51) Driscoll, John, et al., "The Basel Metropolitan Area: Three Borders - One Metropolitan Area" *JCLRD*, 2010, p. 5.

〈표 1〉 지역 및 대도시 공간계획 조정 기구

유럽 수준	<b>유럽연합</b> - 공동체 공간개발 개요(1999) - 영토 아젠다(임시 버전 2007)		
	스위스	독일	프랑스
국가 수준	<b>연방개발국</b> - 지역개발 리포트(2005)	<b>공간계획연방부</b> - 독일공간계획전략지침(2006)	<b>영토의 개발과 경쟁력에 관한 부처간 대표단 (DIACT)</b> - 공공사업 개요(SSC) - 영토개발지침(DTA)(Alsace 제외)
지역 수준	<b>지구(District) 계획</b> - 바젤시 지구계획(2006) - 바젤지역 지구계획(2006) - Argovie 지구계획(2001) - Soleure 지구계획(2000)	<b>개발계획</b> - Baden-Wurttemberg 개발 계획(2002)  <b>지역</b> - Hochrhein Bodensee 지역 계획(1998)	<b>지역</b> - 지역개발개요(SRADT)(Alsace 제외)  <b>로컬정부 연합</b> - Huningue 및 Sierentz 칸튼 기본계획(1998) - 중합국토계획 SCOT(진행중)
로컬 수준		-빌딩 개발	<b>도시계획(PLU)</b> <b>토지이용계획(POS)</b>
초국경 협력	<b>바젤 삼국 유로구역(Trinational Eurodistrict of Basel)</b> - 개발전략 2010		

출처 : Driscoll, John, et al., "The Basel Metropolitan Area: Three Borders - One Metropolitan Area" *ICLRD*, 2010, p. 12.

TEB는 4명의 풀타임 직원이 앞서 언급한 Interreg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여러 활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기술협력위원회는 3개국 18명의 계획전문가로 구성되며, 관리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2개월마다 한 번씩 만난다. 각종 프로젝트는 전문가 그룹이 관리위원회와 의회를 대신해서 추진한다.<sup>52)</sup>

2001년 TAB로 출범하여 2007년에 공간 및 역할 등이 확장된 TEB는 2009년에 'TEB Basel 2020'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핵심 비전은 초국경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적인 기관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52) Driscoll, John, et al., Ibid., p. 7.

〈표 2〉 바젤 대도시 협력의 진화 과정

TAB 2001 개발 컨셉	TEB 2007—프로젝트 및 개발 전략	TEB Basel 2020
바젤 메트로 지역 개발을 위한 공동 비전; 이 보고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협력을 요약하고 32개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포함함	새 프로젝트로 업데이트된 2001년 보고서	초국경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 전시회를 포함한 2020년 메트로 바젤의 비전
TAB-ATB 연결에 의해 계승됨. INTERREG II를 통한 연구 자금 지원	업그레이드된 협의체인 TEB-ETB에 의해 출판됨	2020년 바젤 메트로의 비전으로 TEB-ETB에서 출판됨

출처 : Driscoll, John, et al., “The Basel Metropolitan Area: Three Borders—One Metropolitan Area”, p. 8을 재구성함.

(3) 바젤의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SEB)

경기순환이라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는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무너뜨린다. 게다가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국경을 이동하면서 기존 노동시장을 파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초국경 협력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출현을 가져온 이유다.<sup>53)</sup>

Wallimann(2014)는 신자유주의 경제 확산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사회연대경제의 특성을 활용하여 특정 목적에 도달하고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익명 시장, 글로벌 행위자 및 지역과 국제 엘리트에 대항하여 그들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스위스 바젤에서 설립된 Social Economy Base(SEB) 사례를 살펴보았다.

SEB는 1996년에 설립된 사회적 경제 협회(SEA)로 시작되었다. 회원 자격과 ‘1인 1표’ 시스템을 갖춘 협회는 사회연대경제의 원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SEB의 임무는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지역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

53) Wallimann, Isid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s premises – and the Social Economy Basel example of practice”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Revue Internationale de Sociologie*, Vol. 24, 2014, pp. 1~2.

는 것이다. 상향식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지 않도록 성장세를 ‘유기적’ 수준으로 유지한다. 행정 업무와 성장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자금은 ‘운동’을 통해 풀뿌리에서 나온다.<sup>54)</sup> SEB는 스위스에서 최초이며, 곧바로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협력하여 Institute for Social Economy를 시작했다. SEB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 현재와 미래 개발 문제 해결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가능성을 대중에게 알림
- 사회연대경제를 담은 대중 과정과 컨퍼런스를 제공
- 사회연대경제 관련 개인의 전문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기술 배양
-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 및 재정 수단 설립에 연구와 컨설팅 제공
- 대중매체 인터뷰 및 성명서 제공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연구출판 격려
- 지역, 국가 및 국가 간 수준에서 주변 경제 및 사회적 이벤트와 연계된 사회연대경제 발전과정을 문서화

SEB는 다음 단계로, 1998년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Social Economy Network Co-operative)을 설립했다. 이 협동조합은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유기적인 성장 패턴을 유지했다.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개별 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 참여한다.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직은 규모에 상관없이 1사 1표의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고용 관행 및 잉여금 사용에 대해 동의하면 다른 법적 형태의 조직도 참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익추구 기업 및 NPO 모두 구성원으로 참여 가능하다. 사회적 가치 추구에 동의하는 조직에게 열려있는 기관이어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데 유리하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은 대안화폐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02년, 스위스 프랑과 태환하는 대안화폐(BNB) 실험을 시작했다. 처음엔 네

---

54) Wallimann, Isidor, Ibid., p. 7.

트위크 구성원 사이에서 실험을 진행하다가 2005년에 대중화하기 시작했다. 현재 120여 개 회사와 NPO가 대안화폐를 받아들였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새로운 대안화폐와 1:1로 교환되며, 교환 과정에서 패널티는 없다. BNB는 프랑스 SOL과 상호 교환이 가능하다.

## V.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모델

### 1. 두만강 유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 프로젝트

#### (1) 연해주의 고려인 마을과 바리의꿈

연해주에는 본 연구가 지향하는 ‘두만강 유역 초국경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와 아주 가까운 비전을 공유하는 사회적기업 ‘바리의꿈’이 있다.<sup>55)</sup> 바리의꿈은 Non-GMO 유기농 콩식품 전문 기업으로, 지향하는 비전은 “동북아 (유라시아) 코리안 사회적협동경제 네트워크 구축”이다. 바리의꿈은 1998년 고려인의 연해주 재정착 사업과의 관련 속에서 태어났다. 한국의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본부는 고려인 재정착을 돕기 위해 2004년 우수리스크에 ‘연해주 동북아 평화기금’이라는 현지 조직을 결성했다. 연해주 동북아평화기금은 고려인 정착촌 건설과 콩 재배 등 연해주 농사를 지원했다.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5년 사회적기업 바리의꿈을 한국에 설립했다. 우정마을 등 6개 마을 200여 가구가 유기농 콩을 재배하여 한국에 보내면 바리의꿈이 청국장, 된장, 고추장, 간장 등을 제조하여 한국 사회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연해주에는 동북아평화기금과 바리의꿈(한국 소재) 외에도 초국경 사회연대

55) “중국 러시아 동포와 함께 한 30년, 그의 유량은 끝날 수 있을까, ‘콩단백고기로 지구를 구하라’ 바리의꿈 대표 김현동” 『오마이뉴스』 2020년 2월 22일.

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다. 거칠게 나열하면, 연해주의 5개 농업 기업들, 한국 NGO가 운영하는 농장들, 현대 아그로 상생, 에코호스, 코리아통상, (주)서울사료, 인탑스, 기독교 활동가 주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테바(TEBAH), 고려인 문화센터, 교회들, 연해주 고려인재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산하 연해주 한인동포재활기금 등이 있다. 테바 등 연해주에 속해있는 일부 조직들은 북한과의 교류협력까지 포괄하고 있어 이미 한국-연해주-북한이라는 초국경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 (2) 라선특별시의 (사)하나누리

북한의 소유구조는 기본적으로 국가소유가 중심이 되면서 협동적 소유가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구조다. 따라서 협동적 소유인 협동조합은 북한 주민들에게 낯선 조직이 아니라 과거부터 합법적으로 있어 왔고, 스스로 출자하여 언제라도 만들 수 있다. 개인소유-협동적 소유-전인민적 소유가 공존하는 북한의 소유구조에서, 협동적 소유에 따른 협동조합이 일정 정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열려있다.<sup>56)</sup>

라선에서 활동중인 한국 NGO의 유무는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초국경 협력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사회연대경제를 접목하여 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하나누리가 대표적인 사례다.<sup>57)</sup> (사)하나누리는 2009년부터 라진특구에서 농촌마을 지원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사)하나누리는 농촌마을의 실질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농촌마을과 협약을 맺고, ‘마을금고’라는 방식을 통해 마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마을금고는 스웨덴의 야크은행(JAK Bank)이 적용하고 있는 무이자 저축-무이자 대출 시스템을 차용하였다. 이 사업의 특징은 마을금고 외에도 자립을 위해 해당 마을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제

56) 이찬우, ‘2021 통일부 국제평화포럼’ 발표자료, 2021.

57) 조성찬 위음,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안하고 추진한다는 점이다.

이찬우(2021)는 라선에서 사회연대경제의 국제협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지금까지 라선경제특구의 국제협력은 기업투자가 중심이어서 경제제재(무역통제, 투자금지)의 영향을 직접 받으며, 북한 정부가 노선을 바꾸지 않은 한 당분간 경제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적다는 전제에서, 그는 주민의 생활과 연계한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국제협력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접목할 수 있는 지점으로, 주민들의 자조적 경제활동에 ‘마이크로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무역제재 대상이 아닌 생활용품 생산을 협동농장 작업반, 생산협동조합 등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 (3) 연변조선족자치주(훈춘)

중국의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는 러시아 연해주의 동북아평화기금이나 바리 의꿈 같은 주체가 부각되지 않는다. 중국 정부가 NGO의 활동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에서 협동조합은 보통 ‘농민전업합작사’(農民專業合作社)를 의미한다. 2006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농민전업합작사법(農民專業合作社法)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농민협력경제조직이 농민전업합작사에 편입되어 정식 법인자격을 부여받고 시장경쟁에 참여하는 공식 주체가 되었다. 2007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호 공문에 따라 농민전업합작사법을 성실하고 철저히 수행하며, 농민전업 협력조직의 발전 가속화를 지원하라고 명시했다.<sup>58)</sup> 나름 중국식 사회연대경제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변에서 한국 사회연대경제의 진출 경험도 존재한다. 한국 신협은 1980년대 말부터 동북 3성과 연변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해 신협 실

58) 두성림 외,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 *Industry Promotion Research* 제5권 2호, 2020, p. 96.

립 운동을 지원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신용호조회 및 그 산하 13개 지부 설립을 지원해 주었다. 중국연변 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즉, 한국의 신탁이 연변 신탁을 지원하면, 연변 신탁이 다시 북한 신탁을 지원하는 전략이다.<sup>59)</sup>

## 2.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초국경 협력모델의 재구성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두만강 유역을 둘러싼 초국경 협력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적용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되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하나의 모델로 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일련의 항목으로 초보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3국 1구 두만강 국제관광협력구, 스위스 바젤(Basel)의 초국경 협력 사례 등에 기초하여 3국 접경지역을 공동구역으로 설정
- 공동구역을 관할하는 민간 조직을 설립하고 일부 행정기능 담당(바젤의 TEB에 해당)
- 민간 조직은 사회연대경제를 적용하는 주체들(바젤의 SEB)과 초국경 협력 촉진 프로젝트 추진
- 사회연대경제 주체는 바젤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Social Economy Network Co-operative) 성격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이 조합원으로 가입
- 네트워크 협동조합은 다양한 초국경 협력 사업을 전개 : 관광, 무역, 도시간 협력, 기후변화 위기 공동 대응
- 초국경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의 화폐를 만들어서 유통
- 이러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UN 국제기구 지역사무소 설치 및 GTI 프로젝트 재가동

59) “통일대비 연변동포 신탁운동 지원” 『한국경제매거진』 2006년 9월 4일.

- 향후 두만강 유역이 동북아 통합의 핵심으로 성장함

위에서 제시한 모델의 개별 항목은 세부적인 검토와 구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거버넌스에 대해서 살펴본다.

앞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상이 초국경 협력을 가로막는 가장 주된 이유였기에, 어떤 거버넌스를 가져갈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억제 요인들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대안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때 UN 같은 국제기구가 지지하는 사회연대경제를 기초로 하면 인도지원 사업과 사회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여기서 대규모의 인프라가 없이도 소규모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공동구역에서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각국의 지역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새로운 합의를 이뤄야 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동의도 중요하다. 즉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제도적 플랫폼을 허용하고, 이러한 공간에서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인도지원, 개발협력 및 일반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소수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기에 코리아 디아스포라가 함께 한다면 ‘초국경 협력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의 구축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발전해 가면 중앙정부가 외교관계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유엔개발계획 등 국제기구와 사회적 기업, 지방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협력 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sup>60)</sup>

### 3. 결론 및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북중러 초국경 지역인 두만강 유역에 주목하여, 국제 시민사회가 주체가 되어 ‘초국경 협력’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했다. 결

60) 윤황 외,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 분석: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중심으로”, p. 244.

론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은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유럽통합 사례에서, 마지막으로 두만강 유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 사업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다만 더 효과적인 구심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후속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과는 달리 두만강 유역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성격상 시민사회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연대는 이상적인 구호에 머무를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앞에서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 모델을 초보적으로 제시했는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거버넌스 측면에서,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역정부, 사회연대경제 주체들, 일반 기업, 시민사회가 각각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선순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두만강 유역을 둘러싸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회연대경제에 준하는 다양한 민간 조직들이 상호 어떤 네트워크를 맺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확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수한, “북중 초국경 협력의 지속과 변화 : 최근 경제특구 구상과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2권 4호, 2014.
- 김영찬, “유럽사례에서 보는 북·중·러 초국경 지역 협력방안”, 남북물류포럼 제112회 조찬포럼(2015년 11월 19일).
- 김재효, “[바이든 시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활성화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16, 2021년 3월 22일.
- 김해순, 『평화의 거울 : 유럽연합』, 용인: 킹덤박스, 2021.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북한 VNR을 읽어드립니다”, 2021년 7월 29일.
- 두성립 외, “중국 협동조합(농민전업합작사)의 법과 제도에 관한 연구” Industry Promotion Research 제5권 2호, 2020.
- 라파엘 베탕쿠르, “사회연대경제와 쿠바 경제모델의 전환”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 2019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2019년 7월 16일).
- 문남철, “유럽연합의 국경지역 간 초국경 협력: Grande Région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제56권 3호, 2022.
- 민경태, 『서울 평양 스마트시티』, 서울: 미래의창, 2018.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보도자료” 2017년 12월 7일.
-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북한 비즈니스 진출 전략』, 서울: 두앤북, 2018.
- 신영복, 『변방을 찾아서』, 서울: 돌베개, 2012.
- 신범식, “동북아 초국경 소지역협력과 지역의 발명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천 방향성에 대한 함의” 『JPI 정책포럼』 Issue 8, 2014.
- 신범식 엮음,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소지역주의 전략과 초국경 이동』, 서울: 이조, 2020.
- 안중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손태수·신현하·김월배 옮김, 서울: 서울셀렉션, 2019.
- 우양호 외, “‘북극해(北極海)’를 둘러싼 초국경 경쟁과 지역협력의 거버넌스: 최근의 경과와 시사점” 『지방정부연구』 제21권 1호, 2017.
- 원동욱, “한중 간 초국경 협력의 한계와 가능성: ‘동북아 경제회랑’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중국연구』 제24권 1호, 2022.

- 윤항 외,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 분석: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권 1호, 2015.
- 이수형, “연구 동향과 서평 :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의 한반도 시사점” 『KINU 통일+』 2014.
- 이찬우, “2021 통일부 국제평화포럼’ 발표자료”, 2021.
- 이찬우,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서울: 시대의창, 2019.
- 이현주 외, “일대일로에 대응한 초국경 개발협력 추진전략 연구: 중·몽·러 경제회랑을 중심으로” 『중국종합연구』, 2016.
- 이현주 외,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중국종합연구』, 2020.
- 이현주, “중국의 초국경 협력 평가 및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함의: 호르고스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45권 4호, 2022.
- 장중익,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에 담긴 혁신 코드 포커스” 『SE 이슈』 2018년 1월 31일.
- 제성훈 외, “중·몽·러 경제회랑의 발전 잠재력과 한국의 연계방안”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6-01, 2016.
- 조성찬 엮음,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서울: 맑은나루, 2020.
- 조성찬, 『북한 토지개혁을 위한 공공토지임대론』, 서울: 한울, 2019.
- 조정원, “중·러 초국경 경제협력의 메커니즘과 현황, 장애 요인: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31권 2호, 2021.
- 최영진, “환동해 초국경 개발협력과 해항도시의 관계: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자루비노항 비교”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18권 4호, 2018.
- 최현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달성을 위한 북한의 노력” 『대전일보』 2019년 4월 10일.
- 티에리 장테,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편혜원 옮김, 서울: 알마, 2019.
- 히로타 야스유키, “사회적경제에서 연대경제로 : 가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라이프인』 2020년 6월 15일.
- Driscoll, John, et al., “The Basel Metropolitan Area: Three Borders - One Metropolitan Area” *ICLRD*, 2010.

- Wallimann, Isido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ts premises – and the Social Economy Basel example of practice”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Revue Internationale de Sociologie*, 2014.
- Wevers, Herman T., et al., “Social Entrepreneurship as a Form of Cross-Border Cooperation: Complementarity in EU Border Regions” *Sustainability*, 2020.
-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图们江三角洲旅游合作区规划通过中俄朝三国专家评审”, 2016년 6월 23일.
- “중국 러시아 동포와 함께 한 30년, 그의 유량은 끝날 수 있을까, ‘콩단백고기로 자구를 구하라’ 바리의 꿈 대표 김현동” 『오마이뉴스』 2020년 2월 22일.
- “통일대비 연변동포 신흥운동 지원” 『한국경제매거진』 2006년 9월 4일.
- “중국, 이대로 ‘위드 코로나’ 하면 사망자 100만명” 경고 『동아일보』 2022년 12월 16일.
- “[UNTFSSSE 국제컨퍼런스 2019] 사회적경제에 주목하는 국제기구들” 『이로운넷』 2019년 6월 26일.
- “[이한솔의 러시아 경제], 세계가 극동에 주목하다” 『biz NEWS』 2018년 10월 18일.
- “日, 적국 '선제 타격' 가능해졌다...5년뒤 방위비 세계 3위로” 『한국경제』 2022년 12월 16일.
- “《珲春市图们江三角洲(中-俄-朝)国际旅游合作区总体规划》项目进场考察圆满完成”, 『巅峰智业』 2015년 8월 21일.

Abstract

Exploring the Trans-Border Cooperation Model of the Tumen River Basin  
through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 (SSE)

Sung Chan Cho(Research director, Hananuri Academy of  
Northeast Asian Studies)

The Tumen River basin corresponds to the periphery of Northeast Asia. Symbolized as Manchuria, this place has been a place of confrontation since the modernization period. The transition of the Tumen River basin from a confrontation space to a solidarity space is very important not only for Northeast Asia but also for peace and economic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w-suspended Tumen River Basin Development Plan (TRADP, 1991) claimed similar purposes, but they were limited in that they were large projects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s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existing limitations,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and possibility of the "Social Solidarity Economy" (SSE), which is emphasized by the UN-SDGs as an action strategy, in cross-border cooperation in the Tumen River basin.

Keywords: Social Solidarity Economy, Cross-Border Cooperation, Tumen River Basin, Rason, SDGs, Basel

투고일: 2022년 11월 03일, 심사일: 2022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2일